

동서독 정상회담의 교훈과 2007 남북정상선언 평가

여 인 곤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동서독 정상회담의 교훈

1949년 각기 출범한 동서독은 1970년 최초로 정상회담을 가진 이래 1990년 통일 시까지 총 6회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첫 정상회담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질서에서 데탕트(긴장완화)가 성숙되어 가던 1970년 3월 동서독 접경지역인 동독의 에르푸르트에서 서독의 브란트 수상과 동독의 쉬토프 수상 간에 개최되었다. 제2차 정상회담은 같은 해 5월 역시 접경지역인 서독의 카셀에서 동서독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양 수상 간에 개최되었다. 제1~2차 정상회담은 동서독 간의 이견으로 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동서독뿐만 아니라 동서진영 간의 화해분위기 조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

서독 동방정책의 기수이었던 브란트 수상은 1972년 양독 간 왕래를 용이케 하는 「동서독 교통조약」과 양독 관계를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동서독 기본조약」등을 체결하였다. 이후 동서독은 네 차례(1981, 1987, 1989, 1990년) 더 양측을 번갈아 오가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제반 관계를 발전시켰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아 마침내 통일에 이르게 되었다.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로, 1970년에 약 44억 마르크에 불과하던 동서독 간 교역액이 통일 직전인 1987년에는 약 140억 마르크에 달했다. 또한 동서독 간 인적교류도 대폭 증가하였다. 1970년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은 약 110만 명,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은 약 100만 명이었으나, 1986년 서독주민의 동독 방문은 약 640만 명, 동독주민의 서독 방문은 약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브란트 수상의 동방 정책에 따른 동서독 간의 정상회담 개최와 물적·인적 교류의 증가는 동서독 분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독일통일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2007 남북정상선언 평가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2000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말까지 남북 간에는 14,628명의 이산가족 직접 상봉과 1,876명의 화상상봉이 이루어졌다. 2006년 남북 간 왕래인원은 101,708명에 달해, 1989년 이후 2006년까지 누적왕래인원이 275,449명이다. 1998년 이후부터 2006년 말까지 1,389,690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다. 2006년 남북교역액은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6년 말까지 남북당국 간 대화는 정치, 군사, 경제, 인도·사회 분야에서 176회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교역액과 인적교류 면에서 동서독 관계와 비교하면 남북한 간의 실적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평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꾸준히 추진하였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번영, 화해·통일이라는 3가지 의제를 놓고 집중 협의한 결과 8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기존의 교류협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 면에서, 양 정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향후의 남북관계가 경제와 안보의 병행구조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남북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핵 관련 6자회담으로 한반도문제가 국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전체제라는 또 다른 한반도문제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공동번영 면에서, 양 정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이외에도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 안변과 남포에 조선소 건설 및 농업·보건의료·환경 등 협력사업 추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개보수 등에 합의하였다. 이는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중장기적 포석이다.

화해·통일 면에서,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지속적 이행, 의회간 대화 추진,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2008년 북경 올림픽에 경의선을 이용한 남북 공동응원단 파견, 이산가족 상봉 확대, 국제무대에서 해외동포들의 권리 옹호, 남북 총리회담 개최, 정상들의 수시 회동 등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은 상호 신뢰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화해와 협력을 한 차원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문제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재확인되었더라면 6자회담과 북미 간 상호불신 해소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1월 평양에서 개최될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시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 대한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이 향후 원만히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되어 후대의 역사가들로부터 200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분단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통일에 크게 이바지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